

갈라진 국민의힘... 초·재선들 '계엄 사과·尹 절연 거부' 장동혁에 반발

권영진 "張, 망설이다가 타이밍 놓쳐... 빠른 판단을"

김재섭 "尹 절연 못하면 張 지도자 자책 의심·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개 사과를 거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선을 그은 데 대해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서 향후 장 대표의 신적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함과 잘못된 정책으로 비상계엄이 촉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아무도 모르고 잘못된 배정으로 해서 생긴 내각 잘못에서 실패해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인연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정말 죄송하다" 한 마디는 해야 한다"며 "정권을 통해서 이재명과 좌파에게 넘겨주고, 이가 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계엄으로 빛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면서 초·비상계엄을

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 졸단책으로 인한 국정을 마비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보수가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봉제로 만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쯤은 '내가 이렇게 이런 배정으로 해서 생긴 내각 잘못에서 실패해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인연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정말 죄송하다' 한 마디는 해야 한다"며 "정권을 통해서 이재명과 좌파에게 넘겨주고, 이가 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계엄으로 빛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면서 초·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반쪽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라며 "자발성서가 다가오는데 이런 선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수도권·충청권의 후보들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망설이다가 (사과와 변화)시기를 놓쳤다"며 "‘삼불’의 연을 넓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지자를 반발을 사게 되면 본인이 있지 않나" 하면서 절망하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가)타이밍을 놓치고 있고 본다"며 "민심을 빨리 읽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럴 게냐" 못하면 선거가 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장 대표가 빠른 판단,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계엄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꾸 소환하면 내각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저는 명확하게 장 대표에게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가 지지층을 어느 정도 잘 잡고 나서 중도층 확보하는 이야기를 여러 언론에서 밝힌 걸로 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뚜렷하게 못 한다면 많은 의원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장 대표의 한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재선 의원들의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 "윤이게인이 아니라 윤이(윤리)가 돼야 한다"며 "이럴수록 양비론으로 가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재향한 수준의 혁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의원이 뜻을 모아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진, 이성균·조은희 의원 등 세신 목소리를 내오셨던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조건 하지도 해서 초선 의원들도 동참하게 됐다"며 "이름을 올린 25명

에 개별적으로 사과할 분도 계신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취지에 공감해 주셨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비상 선언'이라고 주장한 전날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전혀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한 데 대해서는 "어떤 취지건 이는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결정을 할 때도 의회 폭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렇다고 계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나. 장 대표의 지난해에 계엄 해재 표결을 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보다는 반성과 성찰, 계엄으로 상처 입었을 국민에게 진지한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라는 다짐을 보여 주셨으면 취임 100일이 훨씬 빛났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李대통령, '나치 전범' 운운... 국민 겁박"과 주장했다.

장동혁 "히틀러 꿈꾸나" 지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칼날은 사법부를 찔렀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정권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폭을 죄는 법 제복과 신발을 아방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치 정권의 히틀러 통틀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만드는 막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권이 내란불에 올린다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란 불에 판공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결국적 패배 외교는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를 겁박할 시

간에 물거품만 칠거야 한다. 공무로 돌아가 시간이었다면 무방한지 들어야 한다"며 "이 전권이 한 인단과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신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불에 종지부를 찍

민주 "재석 60명 미만엔 필리버스터 중단" vs 국힘 "소수당 입틀막"

'국회법 개정안' 정면 충돌
與 "유령 필리버스터 없애야"
野 "일당독재 속속도로 설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부처절한 남용을 막았으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후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괴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의 의견을 지키는 장치"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국민의힘의)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았다고 민생입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수당 입틀막'으로 규정하고, 범여권 위생정당의 반대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헌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이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무슨 대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방뉴스

막을"으로 규정하고, 범여권 위생정당의 반대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헌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이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지닌 의원들에게 참작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 수단이자 배안에서 모든 법을 이루는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는 것은 '일당독재 속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보다 치고 비교할 단계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 참여하지도 않으려 할 것"이라며 "범여권 위생정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 강행 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

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의 정족수인 재석의원 5분의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의회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법사위원 자책 지적
與 "원초적 이해충돌 나경원 먼저 빠져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두고 야당이 법사위원 자책을 문제 삼고 나서 민주당 김경전 의원이 4일 "나경원이 먼저 빠지고 나서 정경태도 빠져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가장 원초적 이해충돌은 나경원 의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개정된 안건에 대해 불응하고 법사위에 배치됐다"며 "더 나아가 법사위 내지못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면 이해충돌의 최정점은 사실 나경원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원천적 해결의 원칙에 의해, 나경원 먼저 빠진다고 선언하고 장경태도 빠지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둘 다 빠지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사위원에 관한한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성비위나 성추행 등의 문제에 관해 항상 원칙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피해자 수사의 원칙"이라며 "그리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한다. 이렇게 해서 장경태 의원 건도 원칙대로 정경태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사실관계 파악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 2주나 한달 이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 진행하고 현재는 고소·고발이 된 상황 아닌가"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원한 강하게 아파하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그런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하나의 원칙이고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1표제 논란에도 민주당 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방안 추가

오늘 중앙임시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외·권리당인 1인 1표제에 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건·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무위원장이 7명

인내 서면으로 44명, 현안이 14명으로 58명이 참석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인1표제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는 질문에는 그는 "없었다. 그냥 통과됐다"고 대답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

영 비율을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 대의원 역할 재정립(TP) 등의 의견을 수렴,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따라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위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박 대변인은 "내일(5일) 오전 9시에 개회가 되는데 중앙위원회의를 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당무위 의결 사항을 통보하면 서 토론 신청도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1표제는 범법이다.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전준위(전국국민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별도로

하게 돼 있으나 (중앙위까지 의결이 되면)당헌·당규에 1인1표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중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준위에서 심의하고 국회 정하는 것이라 지금 어떤 제안을 상정에 설명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걸 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北 억류 국민 6명...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와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 자료를 통해 "현재 탈북민 7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북한에서 7명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화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는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도 신선했다."

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이주오래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개별적 정보도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영빈관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위생각 국가 안보실장을 향해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고, 이 실장은 "물어가지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불분명한 것은 경우가 많다"며 "시정은 파악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해 국제적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대통령실이 이날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 보호·복지 향상"

임호선, 재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0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별,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 교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 유기,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애와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로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명문화 ▲양양·구입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장동혁 기자 dra@sinimilbo.co.kr

장동혁 기자 dra@sinimilbo.co.kr

장동혁 기자 dra@sinimilbo.co.kr